

"여성정책 빈곤, 부실 의원 · 관료 탓"

인천시의회 속기록 분석 결과 여성사안 9.4%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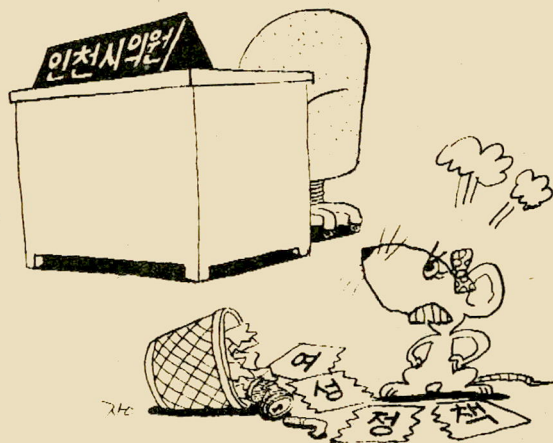
노
95.
5.26

"매춘여성들이 있음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성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가 급적이면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허가하여 세금을 받는 것은 어떨겠는가..."

지난 93년 인천시의회 회의석상에서 모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당시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도 없었고 시 가정복지국장은 '시는 교육이나 상담·검진 등을 실시, 지역을 위생상 국민 보건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자연감소로 유도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했다. 시의회 의원들과 행정 관료들이 매춘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음을 드러내는 한 대목이다.

성폭력 대책 검토도 안돼

여성문제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시의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대표 김예숙, 40)는 지난



16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기 인천광역시의회 속기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의 전화가 이날 밝힌 시의회 의원들과 행정부 관료들의 여성정책과 인식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여성의 전화 김예숙대표는 "이번 분석작업의 가장 중요한 수확은 인천시에서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에서 여성관련 사업은 주로 가정복지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나 매춘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사업, 모자보호, 미혼모 등에 국

한된 사업만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미 마련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88년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는 아예 4년 내내 사업 검토조차 안됐던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에 밝혀졌다.

인천여성의 전화는 복지부와 여성교육, 보건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의회활동을 분석했다. 4년동안 148번의 회의가 열렸으나 여성관련 사안은 14회기에서 일부 거론됐을 뿐이어서 95%에 불과했다.

시의회의원들은 여성관련 사

안중 탁아·매춘 등과 관련한 복지부문에 대한 질의에 82.5%를 할애,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탁아소지원과 보육시간 문제, 교사 질 문제의 실태나 개선상황에 대한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춘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시업무의 교정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여성의전화는 진단하고 있다.

의원들 공약, 실현의지 없어

여성교육에 있어서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업무 보고에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서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상담사업에 동원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정책시행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경애 박사(여성의 전화 전문위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는 지방행정으로 내려오면서 전혀 그 의미가 달라져 여성을 전업주부로 간주하고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교육, 등록하게 하여 일손이 부족한 복지시설이나 행사에 동원하는 대상

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시 보건사회국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피임보건사업에 관한 안전을 유일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은 "복강경수술 주부들의 61.1%가 부작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출산시 사전,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채 다시취업,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력 억제 위주의 반강제적 복강경수술을 받고 있어 여성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시나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나 정책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전화 김예숙대표는 "지난 1기 인천시의회의원들은 전원 남성으로 그 중 30%가 여성을 위한 공약을 했으나 제대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6월 선거에서는 단체장과 의원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이를 관찰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여성과 남성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편 "광역의회 비례대표 중 상당수를 여성 몫으로 할애하기로 했던 민자 민주 등 각 정당은 기존 직능단체들과 정치인들의 로비로 인해 그 숫자를 대폭 축소할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여성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절실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대광 기자〉